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의 전망과 과제

하영선 · 김인준 · 김기환

1990년대 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의 두드러진 경제성장과 역내 의존성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특히 탈냉전에 따른 지역안보상황의 변화, 경제개방과 WTO체제의 출범, 그리고 배타적 지역주의의 대두 등은 이 지역에서 협력 체제의 형성을 더욱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APEC을 중심으로 전개된 협력 체제 논의는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매우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관심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하여 경제협력의 역사적 경험에 적다. 또한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개방과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정치군사적 협력, 사회문화적 협력, 역내 하위 지역주의와의 관계, 역외의 대단위 지역주의와의 관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체제 형성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문제의 쟁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군사적 주도권 경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각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 서 론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나라간 교역과 투자를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의 시장속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나라간 사회문화적인 교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여러 민족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통합된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류의 이상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화(globalization)를 향한 세계질서의 변화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정치질서는 사라진 양극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체제의 한 쪽 극이었던 소련은 해체의 운명을 맞이하고, 다른 한 쪽 극이었던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으나 경제면에서의 해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작성되었음.

게모니 상실과 함께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약화되었다.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정치대국으로서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과거 양극 구조하에서 억제되었던 종족단위의 지역분쟁이 구사회의권과 제3세계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협조체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국의 경제적 국경도 일시에 개방되지는 않고 있다. 각국은 인접한 나라들간에 지역적 블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개방된 세계에 적응하고 있다. 즉 WTO체제는 배타적인 지역경제공동체들과 함께 출현하였으며, 지역화(regionalization)는 현재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지구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EU의 형성은 가장 뚜렷한 예이다. 그동안 분열되었던 유럽은 EU를 통해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대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지역에 NAFTA를 출범시킴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APEC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금까지 정치적 경제적 통합의 노력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열강의 식민지였다가 독립 이후에는 이념적 갈등과 낙후된 경제 등으로 저개발상태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동안의 고도성장과 세계경제환경의 급변을 배경으로 지역적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94년 현재 APEC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인구의 38.1%, 세계 육지 면적의 31.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면에서는 세계 GNP의 57.6%, 세계 교역의 44.3%(수출 43.4%, 수입 45.4%)를 차지하고 있다.¹⁾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21세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경제적으로 통합될 경우 세계 최대의 경제블력이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역적으로 매우 광대하며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및 정치체제가 오랜 기간을 두고 뿌리깊게 정착해 왔다. 또한 다자간 협력의 역사적 경험도 부족하여 역내의 개방과 협조체제를 추진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내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격차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형성될 협력체제를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 잠재력이 될 수도 있다. 역내의 각국이 자국에게 결여된 시장, 자본, 자원, 기술, 노동력 등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면 각국의 발전이 더욱 가속될 것이다.

1) 부표 2 참조.

한국은 교역, 투자, 기술, 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²⁾ 전세계적인 시장개방속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국가발전의 관건이 되는 상황, 더우기 유럽과 북미에 대단위 경제블럭이 형성되어 역외국가를 차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EU나 NAFTA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적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은 국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개혁 및 세계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지역협력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아시아태평양지역협력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경제중심적 시각에 치우침으로써 협력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특수한 정치군사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조건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군사,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의 3중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 형성의 조건

1. 협력의 필요성

(1) 세계질서의 변화와 지역안보상황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구소련과 동구지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후진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중국도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사회주의의 이념도 전세계적으로 퇴조하고 있다.

이념대립에서 승리한 서방세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군사경쟁의 상대였던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군사적인 면에서는 전세계적인 해제모니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위협이 사라진 서방세계는 과거처럼 미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결속력은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일본, 독일 등 경제대국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세계 질서는 군사-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냉전시기 동안 역내 갈등이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2) 부표 3 참조.

사회주의진영의 확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동서 양진영의 대결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전쟁들이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이 이 대결을 주관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이 지역은 평화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이유는 첫째, 그동안 이 지역의 균형을 주도해왔던 주요 국가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정치군사적 대립상황이 해소됨에 따라 이 지역 질서유지자로서의 미국의 해제모니도 축소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그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면서 중국은 이 지역내의 새로운 군사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시아 전역에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냉전시기를 통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ASEAN을 통해 결속했던 동남아의 주요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안보협력체제를 모색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ASEAN의 기능은 과거의 정치안보적인 차원으로부터 경제적인 차원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결속력은 최근들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둘째, 이 지역내 사회주의국가들을 새로운 협력관계에 참여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일찍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12억 인구의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를 자랑하던 베트남도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국가들간의 관계는 이제 그동안 고립되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을 동참시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국가들도 이제는 협력을 통한 경쟁관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아직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국가는 북한과 베마정도인데, 이들도 장기적으로는 협력체제에 참여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동서이데올로기에 의한 양극적 대립 상황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억제되었던 지역적 분쟁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다양성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나라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이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서로 투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냉전시기 동안에 이 지역내의 대립과 갈등은 미국의 지원하에 나라간에나, 나라안에서나 최대한으로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종족분쟁, 종교분쟁, 영토분쟁 등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2) 무역자유화와 경제개방

1995년 1월 1일부터 WTO 체제가 공식출범함으로써 다자주의에 입각한 개방이 세계

경제의 주도적인 원리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비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개방인가, 아니면 도태인가'의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생산의 고도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의 자본, 자원, 기술, 노동력,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협력체제의 규모가 크고 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무역자유화와 경제개방은 전세계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UR의 성공적인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은 전자를 보여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에 형성되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는 후자를 보여준다. EU, NAFTA 등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그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 끝에 1994년 유럽연합(EU)의 출범을 계기로 완전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조만간 유럽지역의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시장은 국경과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결합하여 명실상부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될 것이다.³⁾ 이제 유럽지역은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WTO를 통하여 전세계적인 개방경제체제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부터 북미에 NAFTA를 형성한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APEC을 주도하여, 한편으로는 WTO체제를 보완하여 역내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지역의 배타적 지역주의를 견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공동체는 물론 공식적인 협력체제의 형성마저도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무역자유화와 경제개방의 시대를 맞고 있다. 1980년대가 지날 때까지 이들 지역에서의 협력체제라고는 중국과 인도차이나의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동남아국가들이 결성한 느슨한 형태의 비공산주의국가협의체인 ASEAN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APEC나 EAEC 등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력체제의 형성에 대해서도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위낙 광대하여 그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국가의 범위조차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 ASEAN국가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일본, 한국, 중국을 포함하는 EAEC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

3) EU는 1997년까지 유럽단일통화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단일통화체는 그 실행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추진과정은 EU를 더욱 완전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으며, 미국이나 호주 등의 선진국가들은 자신들을 배제한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대신 APEC을 통한 광역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지역내의 모든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체제가 형성되고 또한 자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3) 베타적 지역주의의 대두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개방과 무역의 자유화는 지역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간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접한 국가들간에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지역주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계적인 개방의 한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내 우선의 개방은 다른 한편으로 역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베타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즉 무역 자유화와 지역주의의 대두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모순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무엇보다도 개방과 자유화가 각국의 상호모순된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한편으로는 보다 넓은 시장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생산품이 자국의 산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농업생산국들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UR의 타결을 지연시켰던 것은 그 가장 뚜렷한 예이다. 그리고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WTO에 선뜻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실상 그동안 ‘국경없는 경제’의 형성을 주도해왔던 선진국들도 이러한 보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지역주의는 이러한 각국의 모순된 이해관계, 자유화와 보호주의가 절충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국의 산업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의 국가를 배제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무역자유화와 경제개방의 잇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EU는 그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며, 동남아국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AFTA도 이같은 속성을 가진다. 또한 하나의 경제공동체로부터 배제된 국가 역시 다른 협력체제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게 된다. EU에 대응하여 동시에 출범한 NAFTA도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협력체제들이 보이는 특성은 ‘베타적 지역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와 경제개방의 원칙은 협력체제에 가입한 역내의 국가들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외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베타적 지역협력체제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수록 베타성은 점차 희석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협력체제에 가입한다면, 지역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 투자 자유화와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EU나 NAFTA 등의 거대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지역적 협력체제가 필요한 면도 있다.

개방과 함께 대두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지역주의적 대응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협력체제의 형성에 소극적이었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장과 역내의존성의 심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가 모색되는 배경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체의 변화에도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력있는 지역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하여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만연하는 등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홍공업국들(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 ANICs)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은 한때 각광받던 남미지역의 국가들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과 외채 부담으로 경제적 파탄을 경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에는 중요한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남아의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도 외자의 도입을 통해 공업화를 서두르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다. 또한 공업화와 함께 증가한 인구와 소비규모는 역내 시장을 급속히 성장시킬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은 이 지역내 국가들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와도 관계가 있다. 즉 경제성장단계가 상이한 인접국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자본, 노동, 시장 및 자원 등을 상호보완하며 기술의 이전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성장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국가들의 역내의존성도 상당히 심화되었다. 즉 과거 일본이나 ANICs의 가장 큰 교역 상대는 미국이었으나,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아시아국가들간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같은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협력은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역내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제도적 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특성과 협력체제 형성의 조건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범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무엇보다도 광대한 지역적 범위와 사회들의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대양주와 북미, 그리고 남미까지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협력체제 형성의 차원에서 문제시되는 지역적 경계는 이러한 지리적 구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미와 남미는 대서양에 접하고 있으며, 유럽 문명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나라들은 오랫동안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지역과는 별로 교류가 없었다. 미국만이 냉전시기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일본과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하여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감소시켜왔고, 더욱이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역시 축소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아시아지역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것은 정치군사적 보호자가 아니라 시장 개방의 주역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UR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미국은 APEC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APEC 정상회의를 열고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였다. 이미 NAFTA를 통하여 미국 경제와 통합된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을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남미 지역에서는 태평양연안으로 가장 긴 영토를 가지고 있는 칠레가 1994년도에 처음으로 APEC에 가입하였다. 아직 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원으로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APEC에 가입 신청을 내놓고 있다.

대양주의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최근까지 주로 유럽 및 미국과 유대관계를 맺어왔으며 아시아지역과는 별로 교류가 없었다. 이들 나라의 주민 대다수는 유럽인종이다. 그러나 국내경제가 난관에 부딪치고 국제적인 개방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던 1989년에 호주는 APEC의 창설을 제의하고 아시아지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편 '태평양연안의 아시아지역'에서도 아직 협력체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것은 주로 사회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북한, 베트남, 인도차이나(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세계적인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모두 끊긴 이 나라들은 국가체제의 존립마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가 되어 있으며 개방과 경제협력에 다가서기에는 현재 국가 내부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형편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도 사회주의체제의 청산 이후 아직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여 국제사회에서는 단지 참여만을 기대하는 약소국과 다름없는 형편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최근 들어 급속한 개방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ANICs나 ASEAN 나라들과는 경제

발전 단계에 있어서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체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적인 정치질서와 자본주의적인 경제제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문제는 넓은 범위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중에서 비교적 활력 있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역내 선진국과 ANIC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ASEAN 6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필리핀, 부르나이)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협력체제 형성을 조건짓는 지역적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2) 정치군사적 조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서구자본주의의 진출에 의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근대국가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용한 일본이외의 거의 모든 지역은 열강에 의해서 분할 지배된 바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명목상으로나마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는 태국뿐인데, 그것은 베마 및 말레이시아를 점령한 영국과 인도차이나를 점령한 불란서 사이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불란서,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주도한 열강의 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이 지역의 지배세력도 변화하였으며, 식민모국이 전승국이었던 까닭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야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얻게 된 지역도 많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체제하에서 주로 미국의 해제모니에 의해서 이 지역의 구도가 정해졌다. 미국은 태평양 연안의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실상 태평양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체제 하에서 미국의 내해나 마찬 가지였다. 오키나와와 필리핀, 그리고 한국은 냉전시대에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시되었다.

사회주의의 붕괴에 의해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해제모니는 계속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해제모니의 상대적인 쇠퇴때문에 그 영향력을 점차 감소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정치 군사질서는 탈냉전 이후 미소간의 군사적 대결이 사라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개선,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국교 수립, 북한과 미국 및 일본 사이의 관계개선 모색, 인도차이나반도의 국내체제 변화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역분쟁적 가능성을 지닌 한반도 문제, 대만문제, 남사군도문제,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군사질서가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로서는 김일성 없는 김정일 체제의 북한, 등소평 사후의 중국, 그리고 ASEAN 일부 국가들의 국내체제적 불안정성과 미국의 장기적 역할 변화 가능성에 따른 중일간의 지역적 주도권 경쟁,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꼽을 수 있다.

냉전적 요소의 일부는 해결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분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의 정치군사질서 속에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새로운 개별국가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쌍무적 협력, 그리고 다자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정치군사질서의 주도세력인 미국은 1990년대 상반기에는 이 지역의 군사적 기반을 부숴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따라 일차적으로 축소조정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중반기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대규모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크와 북한의 군사력 사용에 동시에 대처해서 승리하는 것을 기본지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당분간 이 지역에도 유럽과 같은 규모의 해외주둔병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냉전시기에 형성한 쌍무적 군사동맹체제를 탈냉전시기의 위협요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위협’이라는 우려가 커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와 체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ASEAN 국가들과도 필리핀으로부터의 군사기지 철수 이후에 지역안보를 위한 군사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탈냉전시기에 들어서서 보여주는 새로운 노력의 하나로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적 안보의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개별국가들의 상충하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맹아직 수준의 대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의 정치군사질서 속에서 중국은 독자적인 군사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체제에서 자위대의 증강을 계속하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반도에는 주변상황이 탈냉전적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 남북한은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동남아국가들도 잠재적인 중국의 위협과 국내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속적인 군비증강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상호간의 이해갈등을 정치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속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의 정치군사질서의 장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 지역에서는 국가들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나라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서구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이다.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에는 오랫동안의

권위주의 통치를 마감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나, 이밖의 다른 나라들은 전근대적인 통치구조의 잔존과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중심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장기집권이 이 지역 국내정치의 주된 특징이 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개 수십년씩 장기집권해 온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나라마다 있으며,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권이양의 전통도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태국은 1932년도에 입헌군주국으로 된 이후에도 대개 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부지도자가 통치해왔다. 태국에서의 정변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 내부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일상화되었으며, 일반 대중과는 거의 무관하게 조용히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정변은 유혈충돌 없이 끝났으며 국왕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1992년 이후로는 민간인 출신 수상이 국정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민주적인 정권 이양이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는 속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불교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이 나라에서 국왕은 정치적, 종교적 권위의 상징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 국왕은 프레 수상의 집권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군부쿠데타를 저지함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1967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70만명의 용공분자를 학살하고 '신질서'를 확립한 수하르토장군이 아직까지 통치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장개석 장군과 그의 아들에 의해 지금까지 통치되고 있다.

입헌군주국인 말레이지아는 다소 특이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말레이시아의 9개 주를 대표하는 술탄들이 돌아가면서(주로 나이순에 따라서) 5년씩 왕을 맡고 있다. 왕의 권위는 같은 입헌 군주국인 태국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며,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내용의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말레이인과 중국인, 그리고 인도인으로 구성된 이 나라의 정치는 주로 말레이인의 정치연합체인 UMNO(United Malay Nationalist Organization)가 주도하고 있다.

싱가폴은 1965년 말레이지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리콴유(李光耀) 수상의 집권 아래 동남아지역에 가장 선진적인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다. 싱가폴은 이 지역의 무역중심지이자 공업중심지로서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다. 그러나 싱가폴의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리콴유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과 두 세력이며 고속동(吳作東)에게 수상직을 물려준 이후에도 리콴유는 상급장관(senior minister)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의 아들인 리시엔룽이 정치에 복귀, 리콴유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싱가폴의 정치는 반대파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국민에 대한 통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싱가폴에서도 PAP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야당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정치와 사업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PAP 과두집단의 지배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소득 산유국인 인구 27만명의 부르나이는 전형적인 중세 이슬람국가의 전제군주제 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모든 재산은 국왕의 소유이며 부르나이의 국왕은 방이 1,700 개나 되는 궁전에 사는 세계적 갑부이다. 모든 사회복지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군주가 국민들에게 성지(메카)순례의 비용을 대주기도 한다. 최근에 부르나이의 국왕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 면담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부르나이의 국왕은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 등 외부국가의 침략이나 국내의 저항세력에 의한 도전을 두려워 하여 안보에 큰 신경을 쓰고 있으며, 왕궁을 경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의 용병까지 주둔시키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민중항쟁과 코라손 아키노의 집권을 통하여 정치체제의 형식적인 민주화는 달성하였으나, 민선정부는 모로분리주의 및 공산게릴라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두제적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을 수행하지 못하여 정치와 경제 양면에 걸쳐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에 정치체제의 전근대성과 갈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국가들 중에서는 마하티르수상이 이끄는 말레이지아만이 고도의 정치력을 통하여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인 정치발전도 기대되고 있으며, 주변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태이기도 하다.

버마는 역사적으로 크메르 및 태국과 함께 동남아지역의 패권을 다투어 온 강대국이었으나, 19세기말에 영국과 수 차례의 전쟁 끝에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자립적 사회주의의 노선을 추구해 온 버마는 현재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과 함께 세계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1950년대에 태국과 비슷한 경제 상황에 있던 버마는 대외고립주의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네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군부독재에 의해서 빈곤의 늪에 빠져버렸다. 1987년 2백만 명의 군중이 참여한 시위를 유혈진압한 이후 버마 군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더욱더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더욱더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행하고 있다. 아웅산 수지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세력이 결집하여 정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버마의 정치적 경제적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하겠다.

베트남은 1975년의 승리 이후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중국과의 국경 분쟁 및 캄보디아 내전 개입 등의 후유증을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고 있다. 베트남의 뒤를 이어 공산화되었던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1976-78년간의 대학살과 베트남의 개입, 그리고 그에 뒤이은 내전으로 말미암아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늦게까지 정치군사적인 진통을 겪어온 나라이다. 라오스 역시 베트남전의 확대로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공산화와 함께 40만명에 달하

는 부유층이 태국으로 탈출한 이래 국가적인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한은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에 의해 국도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련의 해체 이후 실질적인 사회주의 국제체제의 붕괴와 함께 체제의 생존을 위해 탈냉전 3중 생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은 국내역량 강화, 미일 등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그리고 기존의 대남 정책의 현상 유지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제체제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체제 생존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아직 후진적인 정치상황에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인물중심의 통치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정치조직의 성격도 개인적인 후원-수혜(patron-client)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속성은 개방과 지역적 협력체제의 형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치체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권력 계승 문제이다. 그동안 카리스마적인 1인 지배자에 의해서 통치되어 온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북한, 베트남 등은 후계자의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내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정치적 종교적 최고권위가 인정되어 온 태국의 왕위 계승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경제적 조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경제발전단계의 격차는 EU나 NAFTA와는 매우 다른 협력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EU는 비교적 동질적인 서구의 선진공업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지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접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편이다. 많은 회원국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인 번영을 누리며 세계경제를 주도해왔으나 20세기 후반기 이후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위세에 눌려왔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불황이 계속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물량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거대한 단일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사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나라들간에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교류 역시 오랜 기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NAFTA는 형식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최초의 경제공동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NAFTA는 인구 2억 6천만에 GNP 6.4조 달러인 미국, 인구 2천 9백만에 GNP 0.55조 달러인 캐나다, 인구 8천 6백만에 GNP 0.39조 달러인 멕시코를 하나의 시

장으로 통합한 것이다.⁴⁾ 미국은 이 지역 인구의 69.2%, GNP의 87.1%를 차지하여 다른 회원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의 전체 교역량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72.6%에 달한다. NAFTA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고임금에 허덕여 온 미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NA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폐소화의 부양에 따른 미국의 재정부담문제와 미국내 노동조합 및 환경단체로부터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북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경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어느 한 나라의 경제력이 전역을 압도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1)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 2)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선진국, 3) 신흥공업국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4)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멕시코, 칠레 등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라들, 5) 저개발국인 필리핀, 6) 고소득 산유국인 부르나이, 7) 사회주의체제에서 급속하게 시장경제와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8) 아직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크메르, 라오스, 미얀마와 북한 등 경제체제와 경제발전단계가 다양한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3년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인구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에 지나지 않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 GNP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7.0% 정도이며, 이 지역국가들의 전체 교역량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1.3%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양국은 모두 쌍무적 관계보다 나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APEC이라는 다자간 협의의 틀을 활용하여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역의 다자간 협의의 틀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ASEAN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역내의 경제적 조건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ASEAN 국가 및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⁵⁾ 동남아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이 가장 잘 정비된 편인 말레이지아는 1993년에는 8.5%, 1994년에는 8.7%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지아의 경제는 최근 거의 전부문에 걸쳐서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이 이러한 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인근 동남아 지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고 있다. 현재 말

4) 1993년도 기준, 부표 2 참조.

5) 한국수출보험공사, 『'95년 주요 개도국 경제전망』, 199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4-1995(각국별) Country Report와 Country Profile 참조.

레이지아내 건설부문의 외국인노동자는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말레이지아의 경제는 국민경제에서 수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맹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더 이상 노동집약산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인력 양성과 새로운 기반시설의 전설을 진행중이다. 말레이지아는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Vision 2020'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자본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첨단 기술산업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도 국내 소비수요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1993년 6.7%, 1994년 7.2%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고성장은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 및 건설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입관세 인하조치로 중간재 및 기계류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기업의 투자시 현지 합작회사에게 과반수의 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자 규제 조치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던 항구, 발전소, 유통, 항공산업, 철도, 핵연료시설 등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진출도 개방하고 있다.

태국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친 호조로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태국 정부는 동남아지역 최대의 도시인 방콕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 태국은 과거 베트남전쟁시기에 미군의 휴양지역으로 개발되어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환경 및 사회의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태국은 쌀 이외에 고무, 목재, 주석 및 보석류의 주요 수출국이며, 말레이지아는 석유, 고무, 주석, 부르나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인도네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고무, 원목의 수출국이다. 그리고 필리핀은 구리의 수출국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전세계적 개방경제의 출현과 기술혁신으로 농업과 천연자원에만 의지하는 경제체제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는 데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방무역체제에 대한 대비와 함께 급속한 공업화가 너나할 것 없이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ASEAN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 역시 매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연평균 10%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그 경제규모가 10년 후에는 2.85배, 20년 후에는 7.4배, 그리고

30년 후에는 19.2배로 성장할 것이다. 1993년도 현재 중국의 GNP는 미국의 1/10, 1인당 GNP는 미국의 1/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과열경기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장률을 낮추는 경제안정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단계의 상이성은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높이며 또한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역내의 선진국은 시장과 저임노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산품의 판매와 자국의 고임금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로 농산물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역내의 후진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간적 위치에 있는 신흥공업국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과 같은 입장이 되기도 하고 후진국과 같은 입장이 되기도 할 것이다. 신흥공업국들은 지금까지 주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역내 시장의 개방은 그들에게 더욱 많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는 역내의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은 주요 공산품과 서비스산업의 시장 확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제조업의 발달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신흥공업국들도 선진국의 공산품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적 소유권의 보장 문제도 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요구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후진국들은 선진국 자본의 직접투자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와 기술 이전 효과를 기대하지만, 과연 자국에게 필요한 형태로 선진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해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아직 극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협력체제를 통한 역내 선진국들의 원조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냉전시대에 안보적 차원에서 역내 후진국들에게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던 미국은 이제는 그렇게 할 이유와 능력이 감소하였으며, 새로운 경제대국인 일본은 그러한 역할에 소극적이다.

한편 역내에서 오랜 결속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에는 시장개방이 지금까지의 결속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으므로 역내 경제가 더욱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로부터 경쟁관계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것이 APEC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을 급속히 개방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선진국 중 미국과 호주는 개방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자국 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큰 관심이 있다. 그런데 동남아 지역 역시 전통적인 쌀수출 지역이며 풍부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와 베트남 등의 정치 및 경제체제가 안정되어 농업생산력이 회복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에 참여하게 될 즈음에는 농산물 생산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4) 사회문화적 조건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어 복합적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 및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인도차이나 지역은 1천 여년 동안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인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 지역은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의 강성기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불란서의 지배를 받았다. 태국 및 베트남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인도의 영향을 받아 불교문화가 번성하였다.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반도 지역은 중세에는 이슬람 상인들의 세계적인 활동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근대 이후로는 유럽 국가의 진출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불란서 등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다.

1993년 현재 세계 인구의 38.1%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인구의 규모가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이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공업화에 필요한 풍부한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민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며, 고도의 기술습득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의미에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장잠재력은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큰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규모나 성장보다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구의 복잡한 구성 문제이다. 종족에 따라서 생활양식이나 종교도 다르다. 중국인은 주로 불교, 유교, 도교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타이족과 베트남은 불교, 말레이족은 이슬람교, 인도인은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가치와 의례가 매우 중요시되며, 사회적인 통합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져오기도 한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한 나라안에서 종족에 따라 직업적, 계층적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것이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인종국가인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 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종족과 종교에 따라 다양한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말레이인이외에 중국인

도 전체 주민의 1/3 정도에 달하며, 이밖에 인도인, 파키스탄인, 타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폴은 중국인이 대부분이지만 말레이인과 인도인도 상당수가 있다. 태국의 경우에도 원주민인 타이족은 4/5 정도이며 나머지는 중국인과 말레이인 등이다. 외래 인종들은 대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3,66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1억 8천만 명의 전체 인구 중 원주민인 말레이인 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당수의 중국인, 유럽인, 인도인, 아랍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전체 인구의 3%(540만 명)에 지나지 않는 중국인이 인도네시아 민간 자본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다양한 인종 구성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외래 민족 중 상당수는 원주민들이 꺼리는 고무농장이나 광산 또는 공장에서의 노동에 충원하기 위하여 인접지역으로부터 데려온 노예나 노동자의 후손들이다. 태국의 화교 중 상당수는 중국의 공산화시기에 주로 중국 남부의 광동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중국인들이다. 또한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로 이주하였다.

이 지역의 중국인들은 비록 숫자상으로는 소수이지만 실상 동남아 지역의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⁶⁾ 화교들은 주로 동남아의 주요 도시 지역에서 상공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원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화교들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교육과 출세를 매우 중시하여 경제활동의 핵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주로 단기적인 이윤이 보장되는 상업 및 음식업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본회수를 기대하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화교들은 태국에서는 상당수가 현지인과 결혼하는 등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지만, 말레이지아에서는 정치적인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1967년도 말레이지아의 인종폭동은 중국인의 정치적인 진출이 '정치는 말레이인, 경제는 중국인과 인도인'이라는 말레이지아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또한 1967년도 수하르토에 의한 인도네시아의 대학살 시에는 공산당 중에 중국인이 많다고 해서 수난을 당한 적도 있다. 현재 남지나해에 대한 중국의 진출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이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이다.

6) 동남아지역 화교의 수는 대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 구성을 보면, 대만 2,090만명, 홍콩 590만명, 타이 658만명, 인도네시아 505만명, 싱가폴 236만명, 필리핀 76만명, 기타 지역 321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三井物産研究所, 1993).

III. APEC의 추진과 성과

1. APEC의 조직과 주요 성과

1950년대부터 경제협력을 추진해온 유럽 지역에 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은 그 역사가 매우 짧으며, 오랫 동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왔다. 1960년대 말에 창설된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나 1980년대 초에 창설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등은 비공식적인 협의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각료회의’(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1989년에 각국의 정부각료들이 참석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로서 출범하였다. 1989년초 한국과 호주간의 정상회담에서 호주의 수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간 협력 포럼을 제의한 후, 역내 각국간의 협의를 거쳐 그 해 11월에 캔버라에서의 제1차 APEC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APEC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APEC의 회원국은 18개국으로서 여기에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한국, 일본, 3중국(중국, 대만, 홍콩) 등 동북아 5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대양주 3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ASEAN 6개국 및 남미의 칠레를 포함하고 있다.⁷⁾

APEC 역시 창설 당시에는 몇몇 나라의 각료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형식상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역자유화와 실질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APEC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를 형성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질 만큼 발전하였다.⁸⁾ 이러한 변화는 1991년

7) 1989년 출범 당시에는 12개국이었으나, 1991년 서울회의에서는 중국, 홍콩, 대만 등 3중국이 가입하고, 1993년의 시애틀 회의에서는 파푸아뉴기니, 멕시코가 가입하였으며, 1994년의 인도네시아 회의에서는 남미의 칠레가 가입하여 현재 19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와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조속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2-3년간 새로운 국가의 가입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대만과 홍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 측의 정치적 주장을 수용하여 회원국들은 ‘member economy’, 대만은 ‘Chinese Taipei’으로 부르고 있다.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정상회의도 ‘meeting of the economic leaders’(경제지도자회의)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APEC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중대한 정상집단회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에 뚜렷이 표명되고 있다. 서울선언은 APEC의 장기적인 목적으로서 무역자유화, 경제협력, 투자확대, 다자주의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제부문(business/private sector)의 능동적인 참여와 시장원리를 극대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APEC의 위상 변화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상호협의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게 되었다. 즉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한 UR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보호주의의 추세가 강화되고 지역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세계경제무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름대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EU의 출범 이후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려가 매우 고조된 바 있다.

APEC의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의 외무, 통상장관들로 구성된 각료회의(Ministrail Meeting)인데, 매년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⁹⁾ 1989년도에 호주의 캔버라에서 창립을 위한 제1차 각료회의가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싱가폴(1990. 7.), 서울(1991. 11.), 방콕(1992. 9.), 시애틀(1993. 11.), 자카르타(1994. 11.), 오오사카(1995. 11.) 등에서 일곱 차례에 걸친 각료회의를 연 바 있다. 제8차 각료회의는 1996년 11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료 회의는 가능한 한 2년에 한번씩은 ASEAN 회원국에서 열기로 합의되어 있다. 이는 APEC에서 ASEAN이 차지하는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93년도에는 미국의 주도로 시애틀에서 제1차 APEC 정상회의(공식명칭은 '경제지도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APEC의 위상이 강화되고 공식적 협력체제의 형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 모임은 무엇보다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의 정상집단회의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시애틀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8) APEC Secretariat, *A Vision for APEC; Towards an Aisa Pacific Economic Community;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to APEC Ministers*, Oct 1993.

9) 각료회의 밑에 실질적인 운영기구인 고위간부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가 있다. 고위간부회의는 각국의 차관보급 관리들로 구성되며 연 3-5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또 그 밑에는 무역투자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및 경제위원회의 3개 위원회와 10개의 실무그룹이 있다. 아페의 상설기구인 사무국은 1993년 2월에 싱가폴에 설치하였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부국장을 두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당해년도의 의장국에서, 그리고 부국장은 차기의 의장국에서 맡도록 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이 지켜야 할 지침들을 정하였다.¹⁰⁾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경제지도자회의는 APEC의 실질적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향후 APEC 활동의 기본 원칙을 정리한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였다.¹¹⁾

보고르 선언의 글자는 1) 개도국 2020년, 선진국 2010년까지로의 무역자유화 시한 결정, 2)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통하여 공동체의 전단계의 하나인 교역그룹의 형성, 3)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 4) 무역과 통상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절차의 신설, 5) 환경문제와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증진, 6) 인적 자원의 교류에 대한 협력의 강화 등이다. 이 밖에도 보다 자유화된 투자준칙의 채택, 중소기업고위정책자회의의 구성(실무작업반으로부터 특별 그룹으로 승격), 무역투자위원회(CTI) 안에 통관절차간소화위원회의 설치, 공산품 규격 통일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인력 개발 선언,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민간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자문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고르 선언은 APEC이 지금까지의 느슨한 협의체로부터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추진해가는 실질적인 경제협력기구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10) 여기서 결정된 8가지 지침에는 1) 통상장관회의의 주선, 2) 태평양경제포럼(PBF)의 설치, 3)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4)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경제자원자교환프로그램(Business Volunteer Exchange Program)의 실시, 5) 중소기업관련 장관회의의 주선, 6) 투자현안을 포괄하는 원칙의 개발, 7) 에너지 보장, 경제성장, 환경 보호 등 3E를 위한 정책 협의와 실시계획의 개발, 8)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1) APEC의 기본적인 방향은 저명인사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과 태평양경제인포럼(PBF: Pacific Business Forum)에 의해서 기획되었다. 1992년 각료회의는 2000년까지의 아태지역내 무역에 대한 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정부단체인 저명인사그룹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EPG는 1993년 시애틀의 각료회의에 'A Vision for APEC'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EPG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각료회의는 EPG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PG는 1994년 자카르타 각료회의에 'Achieving the APEC Vision'이라는 제목의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1995년의 오사카 각료회의에는 'Implementing the APEC Vision'이라는 제목의 3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PBF는 1994년에 설치되었는데, 경제지도자회의에 직접 보고한다. PBF는 1994년 보고르의 경제지도자회의에 'A Business Blueprint for APE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5년 오사카의 경제지도자회의에 'The Osaka Plan; Roadmap to Realising the APEC Vision'이라는 제목의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들을 통하여 APEC의 장기적 전망과 구체적 현안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룰 원칙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APEC의 과제가 점차 분명해지고 시급해짐에 따라 이를 추진할 조직의 확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무역투자기본선언(TIF; Declaration on 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에 따라 각국의 무역 및 경제분야 정책 실무자로 구성된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이제 경제협력의 가장 구체적인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1) 세계 경제환경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APEC 회원국간의 상호 연관성과 관련된 정책현안, 2) 역내 재화, 서비스, 투자 및 기술이동에 영향을 주는 왜곡 및 장애요소, 3) 투자 및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래비용의 절감, 4) 개별 APEC 실무그룹의 과제와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정책 현안, 5) 무역정책 개선, 역내무역장벽 확인 및 호혜적인 해결에 있어서의 역내 기업부문의 기여 증대방안 등을 논의하며, 고위간부회의를 거쳐 각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그 초대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가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1995년 11월 오사카에서 열린 제3차 경제지도자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APEC을 통한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초기조치(Initial Actions)들을 발표하였으며, 보고로 회의에서 약속한대로 자유화 및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채택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수 차례의 고위실무자회의(SOM)를 통한 의견 조정 끝에 준비된 행동지침은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과 '경제 기술 협력'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한 일반원칙으로서는 ① 포괄적인 자유화, ② GATT/WTO 협정과의 조화, ③ 자유화 계획간의 형평성, ④ 비회원국에 대한 비차별주의, ⑤ 자유화 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 ⑥ 보호 수준의 강화 금지, ⑦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자유화 동시 시작 및 지속적 추진, ⑧ 농업 등 민감부문의 자유화의 융통성, ⑨ 자유화를 지원하는 경제기술협력의 적극 추진 등 9개의 항을 천명하고, 1997년 1월부터 자유화계획을 이행토록 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 기술 협력의 과제로서는 ① 기업인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APEC 교육재단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 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②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 산업과학 및 기술 이전의 촉진, ③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 ④ 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무역진흥, 해양자원 보존, 농업 및 어업 기술, 관광홍보 및 교류 등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보고로 선언과 일반원칙 1항에 따라서 자유화 대상 범위의 포괄성을 인정하되 각국의 취약분야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인지의 여부가 이번 오사카 경제지도자회의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부문도 여타 부문과 같게 무차별적인 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반원칙 8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 등은 회원국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약부문에 대한 융통성(flexibility) 부여를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섭끝에 8항을 수정하여

존치키로 하였다.

세 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APEC은 이제 역내의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강력한 공식기구로 변화하였다. 이제 APEC을 통한 자유화는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제4차 경제지도자회의는 1996년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그리고 제5차 경제지도자회의는 1997년에 캐나다의 뱅쿠버에서 열기로 합의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APEC의 성과는, 첫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국가들의 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10여명이나 되는 역내국가들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겪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 번영을 지향하는 이 지역의 열망도 한껏 고조되었으며 협력체제의 모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둘째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세에 적응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1994년의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역내의 선진국은 2010년까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시장개방을 이행하도록 합의하였는데, 이는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사회들이 하나의 경제협력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서 WTO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도 적어도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의 유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직업투자, 사회적 지원 등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의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협력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논의의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 현단계로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역내의 개발도상국들로서는 오히려 시장개방에 앞서 요구하는 내용들이며, 원래 창설 당시부터 APEC이 주로 추구해 온 주된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성과도 시장개방의 진전과 함께 더욱 가속될 것이다.

넷째로는 APEC이 경제발전단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전연 다른 다양한 사회들간에 협력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리적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와 대양주, 그리고 남미와 북미의 네 개 대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내에는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이 제각기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여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민주국가로부터 전근대적 과두제적 지배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유럽-미국적 문화권, 동북아의 유교문화권, 동남아의 불교 및 힌두교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EU나 NAFTA와는 달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장개방을 포함한 경제협력의 문제뿐만 아니

라 군사안보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모든 차원에 걸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APEC은 세계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¹²⁾

(1) 미국

미국은 APEC의 초기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 APEC의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APEC-TIF(무역 및 투자 기본선언)의 채택을 주도했으며,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역내의 시장개방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다. 현재 미국은 APEC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적극적인 입장 to 취하고 있는데,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이 APEC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WTO체제의 출범에 발맞추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을 조속히 개방하려는 것이다. UR이 비록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지만, 그 주된 논의상대는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공업국들이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흥공업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UR에 소극적으로 이끌려가는 입장이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시장의 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해나가는 별도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일본주도의 아시아지역 경제블록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유럽지역은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EU를 형성하여 이에 대비하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 역시 NAFTA를 결성하여 대비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급변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급기야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제안되었다. 1990년에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이 그것인데, 이 제안에서는 ASEAN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인의 국가들만을 포함하고 미국과 호주 등 유럽인 국가들은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지역에 활발히 진출해 온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대신에 자국을 포함하는 광역적 경제협력체를 적극적으

12) 노재봉, 『지역주의의 심화와 한국의 선택』, 1993. 12.

경제기획원, 『APEC의 현황과 전망』, 1994. 11. 참조.

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미국은 APEC의 강화가 역외국가에 대해서 배타적인 EU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은 EU의 출범과 동시에 즉각 NAFTA를 결성하였으나, 캐나다나 멕시코 등은 미국에 비하여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들로서 그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일본과 중국, 신흥공업국들과 미국을 한데 묶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은 EU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자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혜택모니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기를 통하여 미국은 태평양지역에 대한 공산주의의 진출을 저지하고 각국의 정치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정치군사적 혜택모니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정치군사적 혜택모니는 그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경제교류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21세기에는 태평양 지역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비하여 인접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2) 일본

최근 들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19세기말에 ‘탈아입구론’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제 20세기말에는 ‘탈미입아론’이 대두하였는데, 이같은 방향전환은 그동안의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아시아지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국, 중국, 대만 및 동남아지역에 상당한 정도로 진출해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일본 역시 APEC의 활성화를 지지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각국의 정책조정논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이 APEC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일본은 APEC이라는 다자간 논의의 틀이 미국의 쌍무적 시장개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시장의 완전개방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며, 양국간의 갈등은 최근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미국은 APEC의 강화를 통해서 일본시장의 완전개방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다자간 의사결정과정을 활용하여 미국의 압력을 완화할 것에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은 해외시장 및 원자재 공급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국가간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농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역내 무역자유화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 일본은 자국내의 고임금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아시

아지역으로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은 임금이 매우 낮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으므로 일본의 투자대상지역으로 적절하다. 또한 동남아 각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일본내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넷째로 일본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의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APEC은 경제기구이지만,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개입을 제고시키고,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제안하는 EAEC 등이 활성화될 경우에, 일본은 지역내의 유일한 선진국으로서 이 경제블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블럭의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에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시장에의 접근이 또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경제블럭의 창설 노력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3) ASEAN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주도에 의한 APEC의 급속한 시장 개방 기구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ASEAN에서 미국 주도의 APEC 강화에 가장 강한 반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지아인데,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두 차례의 정상회의에 모두 불참을 선언하였으며, 보고르 선언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시장개방의 시한에 대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개방시기를 독자적으로 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이 APEC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역자유화시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자국내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ASEAN은 기본적으로 APEC을 협력사업(Working Group) 중심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을 구체적으로 얻어내려는 입장에 있다. 이들 국가 중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무역자유화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싱가폴과 필리핀 등은 APEC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이들도 ASEAN 결속력이 손상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ASEAN의 결속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ASEAN 국가들은 협력체제의 중심을 서태평양지역으로 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1990년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라는 이름하에 ASEAN 5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경제블럭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강한 견제에 부딪혀 1991년에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AC: East Asian Economic Caucus)라는

명칭으로 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다시 제안되었다. 그러나 ASEAN 제국은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의 설립에 합의하고 이를 APEC의 하위지역주의로 설정하여 APEC 내 백인국가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있다.

한편 ASEAN은 1994년 7월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발족시키는 등 안보문제에 대한 결속을 다지고 있다.¹³⁾ 이는 유럽의 통합에 중대한 기여를 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본뜬 것으로서, 역내의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간의 분쟁을 방지하며, 분쟁 예방 절차를 논의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4)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협력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APEC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무역자유화, 기술이전 및 개도국 우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역내에 다자간 협력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그 시장 규모로 인해서 21세기에는 경제대국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구소련이 붕괴한 지금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이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외교정책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즉 1991년에 APEC이 함께 참여하면서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부를 수 없다는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APEC은 대만의 공식 명칭을 'Chinese Taipei', 회원국을 'member economy', 그리고 정상회의를 'meeting of economic leaders'로 부르고 있다. 최근 대만 해역에서의 군사적 도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국은 APEC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여부가 APEC의 참여 정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증강과 남지나해에 대한 진출이 ASEAN 국가들에게는 위협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¹⁴⁾

13) ARF는 ASEAN 6개국 이외에 역외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의장국 등 7개국, 그리고 옵서버로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뉴우기니 등 5개국을 참여시키고 있다.

14) 중국의 시장경제가 계속 성장하여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에

(5) 기타 국가들

호주 및 뉴질랜드는 198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경제적 의존도가 깊어감에 따라 A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1989년 APEC의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ANZCERTA(Australia —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를 통하여 결속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유럽계 주민들로 구성된 국가로서 과거 아시아 지역과는 거리를 두어 왔으나, 세계 경제의 급변을 인식하여 그동안의 유럽시장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리적 조건때문에 EU나 NAFTA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며, 세계시장의 개방추세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 많은 농산물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EU, ASEAN 등 여타 그룹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는 호주는 자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블록의 창설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현재의 APEC처럼 광범위의 느슨한 경제협력체제가 오히려 중견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캐나다는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서 높은 경제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NAFTA를 통하여 미국 경제에 통합되어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 형성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직 개방경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들이다. 즉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이다. 이들은 아직 대외고립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국내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 때문에 개방이나 외국과의 교류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중 베트남은 중국처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폐쇄경제를 고집하고 있다.

라오스, 크메르, 베트남 등의 경우에 현재의 정치체제로서는 자유화와 개방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사회주의진영의 붕괴 이후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모두 상실한 이들 국가에서 폐쇄정책의 지속은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한 정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 역시 개방을 통해서 생존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정권들이 개방을 주도하든지 아니면 개방을 주도할 다른 세력에 의해서 대체되든지 할 것이다.

서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Edmond D. Smith, Jr., "China's Aspiration in the Spratly Island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6, No. 3, Dec 1994, pp. 274-294. 참조.

IV.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의 쟁점과 과제

1.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현재 APEC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어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이 지역의 국가들의 시장개방을 제도화하여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APEC의 제도화, 공식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미국이 협력체제의 범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은, 첫째 미국을 제외한 베타적인 경제블럭이 이 지역에 형성되어서는 안되며, 둘째 아직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여야 하며, 셋째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해야 하며, 넷째 지나치게 많은 국가들을 시장 개방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 추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이들의 참여를 보류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설정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제의 범위는 바로 지금의 APEC의 구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의존과 함께 미국의 시장과 자본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만, 아직 미국의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나라들이 주로 기대하는 것은 선진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활용하려는 것이지 결코 자국의 시장 개방 자체가 아니다.

ASEAN의 회원국들도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ASEAN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ASEAN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나 약소국들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협력체제 논의에서도 ASEAN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다자간 협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세안국가들이 APEC의 범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도 미국과는 반대이다. 현재 남미의 많은 나라들과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도 APEC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한 1993년 11월의 시애틀각료회의에서는 향후 2-3년간 더이상의 가입 문제를 보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말레이지아를 비롯한 ASEAN은 APEC이 더 많은 회원국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APEC이 공식적 제재력을 갖는 기구로 발전하기보다는 느슨한 협력기구로 남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APEC의 기능과 범위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미국과 ASEAN의 갈등은 경제협력체제로서의 APEC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역내의 다른 회원국들은 양자

사이에서 대체로 뚜렷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형편이다.

또다른 역내 경제대국인 일본은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에 가장 깊숙히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북미는 현재 일본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시장이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는 미국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일본은 동남아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으며, 현재 동남아지역은 일본의 주도하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탈미입아론’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은 몇 가지 장애요인을 갖고 있다. 그 첫째는 과거 1940년대의 제국주의적 진출이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주도하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나 ASEAN 중 어느 일방을 편드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공식적인 정책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으며, 단지 현재 민간 기업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진출이 확대될 조건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체제 형성 문제는 EU나 NAFTA와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APEC이 경제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역내의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및 사회주의국들의 요구를 고르게 수용하여야 한다. 선진국은 주로 시장을 원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기술이전이나 자본도입, 또는 관광수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채 차관이나 원조, 또는 일방적인 특혜만을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경제협력은 단순한 시장개방의 제도화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다.

만약에 APEC이 EU나 NAFTA와 같은 베타적 경제공동체의 형성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APEC 자체보다도 동남아지역에서의 EAEC나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동해경제권’, 또는 ‘화교경제권’ 등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NAFTA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APEC까지 주도하겠다는 것을 역내의 다른 나라들에게 납득시키기도 어렵다.

그런데 APEC이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원활히 조율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경제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체제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여러 유형의 국가들을 한데 묶는 것이며, 이는 현재 경제협력을 기본축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차원의 협력활동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문제는 정치협력 및 사회협력의 과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APEC을 중심으로 진전되어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 논의는 그것이 주로 무역 자유화에만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어렵게 될 소지가 많다. 만약에 이같은 잠재적인 장애요소를 방지한 채 시장개방만을 조급하게 추구한다면, 역내의 갈등이 빈발할 소지도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4년의 보고르 경제지도자회의 및 자카르타 각료회의는 1995년초 WTO의 출범에 발맞추어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진일보시키고자 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 논의는 주로 선진국의 관심사인 역내 무역자유화의 일정 확정과 조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주된 관심사인 기술이전이나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선언적 차원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개방시기 결정문제이다. 보고르 회의에서는 일단 선진국은 2010년, 그리고 후진국은 2020년까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아직 각국의 불만과 애매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역내의 신흥공업국들을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라는 점도 미결사항인 채로 남게 되었다. 이 국가들의 선진국 분류 여부는 자국 스스로 판단하도록 결정하였지만, 역내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계속적인 압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은 우여곡절끝에 일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지만,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으로 다시 분류될 것이다.

두 차례의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APEC이 경제협력체라는 본래의 성격을 벗어나 무역불리화하는 것에 반대해 온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보고르선언을 거부하고 개방시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2. 주도권과 정치안보협력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 논의가 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초점을 두어 전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협력의 성과는 또한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협력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정치적 사회적 격차와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호간의 기본적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모든 협력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냉전시기 동안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불신의 골이 깊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내 국가간에 신뢰를 쌓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는 냉전시기에 브

레즈네프와 고르바초프 등 소련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이같은 주장은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자간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역내 국가들에 의해서 수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89년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아시아지역의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게 되고,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다자간 협의기구의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과 질서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가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발족시킴으로써 처음으로 범아시아적인 안보협력기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ARF는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거의 그대로 본뜬 것으로서,¹⁵⁾ 역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ARF는 ASEAN 6개국 이외에 '역외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의장국 등 7개국, '아세안 협의국'으로서 중국, 러시아 등 2개국, '외무장관회의 읍서버'로서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 뉴우기니 등 3개국을 참여시키는 $6 + 7 + 3 + 2$ 의 중중적 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태국은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대표를 게스트로 참여시켜 모두 20개국의 역내 국가 외무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ARF가 출범하였다. ARF는 역내의 신뢰 증진, 핵 불확산,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 비기밀 군사정보의 교환, 해양 안보문제의 협의, 분쟁예방을 위한 외교 활동 등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ARF는 ASEAN의 주도하에 결성되었는데, 역내의 안보협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성공적 출범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안보협력기구의 출범은 경제협력기구인 APEC의 순조로운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급속한 진전과는 달리 이 지역내의 정치군사적인 안보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지역으로부터 후퇴한 이후 남지나해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위기의식이 이같은 포럼을 형성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대국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립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강대국들을 모두 다자간 회의의 틀에 끌어들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즉 미국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¹⁶⁾

15) CSCE는 1973년에 나토 16개국, 바르샤바조약기구 7개국, 스웨덴 등 중립국가 12개국 도합 35개국의 유럽국가가 유럽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결성하였으며 1975년에는 이들 국가의 정상회의를 통하여 유럽의 영구평화를 다짐하는 헬싱키선언을 채택하였다.

16) 西原正(1995) 참조.

이같은 ARF 창설은 그동안 정치군사적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들이 협의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예컨대 그동안 ASEAN의 주된 적성국들이었던 러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이 한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일본과 러시아, 미국과 베트남, 중국과 베트남도 다른 나라들 사이에 앉아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다자간의 협의에서는 비록 적성국가들끼리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부르나이를 제외한 ASEAN 5개국과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10개국의 참여하에 민간차원의 민간안보협의기구인 CSCAP(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체)이 거의 동시에 결성되어 이러한 신뢰회복과 안보협력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닌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도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⁷⁾ 즉 다자간 협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 문제였지만, 정작 그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허한 논란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이 대만의 참가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그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위낙 광역에 걸쳐 있는데다가 국가들간에 격차와 이질성이 너무 커서 공동의 안보문제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소련과 일본간의 영토 문제, 한반도 문제,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문제 등 이 지역내의 주요 분쟁 사례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들이 다자간 회의를 통하여 개입할 명분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이질성과 사회문화협력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체제는 APEC를 통해서, 그리고 군사안보협력체제는 ARF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APEC과 ARF간에는 그 가능과 구성국가의 범위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라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범아태지역 협력체

17) 북한은 의장국인 태국에 대해서 ARF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주최측에서 거부하였다.

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약세에 있는 ASEAN 국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힘에 의한 타결보다는 상호존중과 다자주의적인 협의에 의한 균형을 그 주된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 추진에서 주된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내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와 중국이나 북한 등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과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의 균형 문제 등이지만, 그 배후에는 각각의 나라들이 처한 국내사정과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 상호간의 불신과 이해관계 상충은 사회문화적인 거리감에 의해서 실제보다도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은 그동안의 역사적 배경과 이질적인 문화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선진국들은 대개 영미문화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백인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경제대국 일본역시 19세기 후반부터 탈아입구론에 입각하여 서구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번영한 나라이다.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보호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기독교도가 매우 많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에 비하여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유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문화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진출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백인국가들은 동남아국가들의 ‘아시아주의’에 의해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APEC을 통한 시장개방 노력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말레이지아는 인구의 70%가 회교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문화권과 회교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분쟁들을 치르고 있다. 주민의 사고나 생활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의 역사 때문에 정치적 입장의 표면에 조심스러운 형편이다. 또한 중국은 일차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남아 각국 내부의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는 화교들과의 인종적인 갈등도 결부되어 있다.

영미계통의 유럽인은 경쟁과 계약 등 근대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는 행위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혹과 불신이 배태되어 협력에 중대한 장애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협력은 공동체적 협력체제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이지만, 중요한 수단도 되는 것이다. 종교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는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소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문화적 우월성의 과시는 대개 타문화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차원에 있어서의 협력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사업에만 한정될 수도 없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문화적 협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첫째로 이미 공식적 협력기구로서의 기반을 갖춘 APEC을 중심으로 하여 각국의 정부가 역내의 사회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한 제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APEC에서는 각국이 역내 사회를 이해하고 협력의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는 연구센터(APEC NRC: National Research Center)들의 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대외정책연구원(KIEP)이 중심이 되어 국내 14개 연구소의 콘소시움을 형성하고 있다.¹⁸⁾ 그리고 1994년에는 한국의 주최로 APEC 테크노마트가 열린 바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경제협력의 목적뿐만 아니라 역내 민간인 전문가 수준에서의 사회문화적인 교류의 목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PEC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이러한 사회문화협력은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APEC이 사회협력의 차원에 대해서 보다 비중을 둘 것이 요청된다. 언론, 학술, 문화, 스포츠 분야의 국제적 활동을 장려하는 공식적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를 통한 간접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위성방송이나 TV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며, 타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폐쇄적 태도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APEC를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은 국제적 부가 가치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역내 회원국들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대하는 데에도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유학생, 관광객,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형태로 역내의 인적 교류가 확대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에는 장기체류를 통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나라간 협력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로 활용할 경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 모든 학

18) APEC연구센터는 연구, 교육, 자료수집과 관리, 정보교환, 정부의 지원 등을 그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도 아시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나라들에서 연구주제의 설정이나 재정지원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각국의 추진상황은 1995년의 오오사카 각료회의에서 다시 점검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발전된 연구체계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분야에 걸쳐서 유학의 대상지가 선진국, 특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아닌 인문학,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선진국의 문물과 사고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역내의 이웃 문화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 인문학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서방세계의 선진국들에 뭇지 않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배울거리가 많으므로 서로간에 교류가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역내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APEC 정상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1994년에 설치된 PBF(Pacific Business Forum) 이외에도 현재 APEC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가지 민간협의체들이 있다. PECC는 학제를 중심으로 경제계, 관계가 참여하고 있는데, 1980년도에 창립되어 20개의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APEC에는 업저버로 참관하고 있다. PBEC는 역내의 최고경영자, 은행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967년에 설립되어 38개국의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는데, APEC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공회의소들의 연합체인 CACCI도 있다. 이밖에도 APEC 지역내의 시민운동단체들은 APEC 각료회의와 병행해서 APEC/NGO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APEC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문제, 인권문제, 노동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보다 인간지향적인 발전(People-Oriented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다. APEC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같은 민간단체들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실질적인 사회적 문화적 협력도 증진될 것이다.

4. 역내의 하위지역주의와의 관계

ASEAN, ANCERTA, NAFTA 등 역내의 소지역주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APEC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남아의 아세안국가들은 2008년까지 AFTA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별도의 무역자유지대 설치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APEC으로 이를 대체하는 한편, NAFTA, 미주자유무역지대 등 별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APEC의 발전과는 그 기능상 중복되게 된다. 미국의 반발에 부딪친 아세안국가들은 EAEC를 APEC의 하위기구로 설정하고 있으나, 아직 그 기능상의 명백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는 NAFTA나 ANCERTA도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역내의 소지역주의가 강화되면 APEC을 중심으로하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나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은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의 협의는 소지역주의간의 협력문제로 전이될 것이며, 각국의 선택은 어떤 소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인

가라는 문제로 한정될 것이다. 그리고 역내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개방경제의 잇점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EU 등 대단위 경제공동체에 대하여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APEC에 준하는 대단위의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ASEAN이 주장하는 AFTA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이다. 미국은 AFTA를 저지하면서 APEC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ASEAN은 AFTA를 강화하면서 APEC을 무력화시키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직 어떠한 공식적 지역경제협력체제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APEC이든 AFTA든 실질적인 협력을 기할 수 있는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ASEAN의 주장 중 어느 한편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형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저명인사그룹(EPG)으로 하여금 APEC과 여타 역내 지역주의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쉽사리 정리하기 어려운 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ASEAN의 AFTA 설치를 억제할 만한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ASEAN은 원래 1967년 동남아의 비공산국가들이 경제, 문화, 사회 협력을 위해 결성한 느슨한 형태의 반공기구로 출범한 것이다. ASEAN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대두하고, 소연방의 해체와 동서냉전 종식으로 인한 인도차이나의 정세 변화 등 동남아지역의 안보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국가들도 ASEAN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구발전 논의를 전개하게 되었다.¹⁹⁾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SEAN은 1993년 1월 1일부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관세인하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1992년 1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향후 15년 이내에 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19)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1990년 12월 아세안과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EAEG)의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로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로 수정 제안되었다. 이 제안 역시 논란이 많았으나, 1993년 7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MC)에서 EAEC를 APEC 틀 안의 협의체로 추진해 나간다는 데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2008년까지는 역내의 관세를 0·5%로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ASEAN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까지 AFTA가 창설되면 현재 3억 3천만 명의 인구와 2,930억 달러의 국민총생산(GDP), 그리고 연 7% 성장률의 아세안 지역내 통합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이 최근 APEC을 강화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것이 EAEC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0년대의 동남아국가들에 있어서 일본은 더 이상 1940년대에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 군국주의적 팽창을 꾀했던 위협세력이라기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EAEC 구상이 일본과 함께 중국과 한국을 또다른 주요 참여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일본의 독점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고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는 이밖에도 많은 소지역주의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 지역들이 있다. NAFTA와 ANZCERTA는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경우이며, 태국을 중심으로 인접국가들을 포함하는 바트경제권, 태국-말레이지아-싱가폴을 잇는 이른바 ‘성장삼각지대’, 홍콩을 중심으로 남중국과 대만을 포함하는 남중국경제권 등이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본토와 동남아의 경제를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의한 ‘화교경제권’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이 될 잠재력이 있는 지역도 있다. 동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만주, 한반도,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권’이나 중국, 만주, 한반도를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시될 만한 것이다. 아직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APEC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남미지역도 나름대로의 동질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1961년에 발족한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에는 남미의 11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1969년에는 이 중 몇 나라가 ANCOM(Andian Common Market)을 결성한 바 있다. 1980년에는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이 출범하였다. LAIA는 자유무역의 확산보다는 자원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간의 쌍무협정을 모든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나라들마다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특혜 공여 및 의무조항의 적용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결속을 다져왔다. 또한 1991년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의 경제통합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포함하는 공동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SCCM(Southern Cone Common Market: Mercosur)이 결성되었으나 아직 제도형성의 차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5. 역외의 대단위 지역주의와의 관계

APEC의 강화에 유럽지역의 통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점은 앞서 보았던 바와 같다. EU의 통합은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대국에 이끌려 온 유럽이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나서는 계기를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시장의 통합은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들로서는 같은 입장에 있는 유럽국가에 비하여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로서는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역내교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비록 WTO 체제가 출범하여 개방경제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세계의 각 지역은 경제블럭의 형성을 통하여 이러한 체제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EU의 출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은 NAFTA의 결성과 함께 APEC의 공식적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서두르고 있다. EU는 1994년 10월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2010년까지 '유럽-지중해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40개국의 국가에 8억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EEA를 통하여 결속된 인구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일단계 조치로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을 가입시켜 1995년부터는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까지는 동구권의 6개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미국도 마이애미에서 쿠바만 불참한 가운데 남북아메리카 34개국의 정상회의를 열어 2005년까지 FTAA를 발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같은 EU 및 NATFA의 확대 움직임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지역경제공동체의 주도를 두고 미국과 유럽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대단위 지역경제공동체가 현실화되면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주의가 '역내 자유무역, 역외 보호주의'라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PEC의 강화가 APEC과 역외의 다른 대단위 경제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중요한 원리로 천명하고 있는데,²⁰⁾ 과연 그것이 EU,

20) 개방적 지역주의란 APEC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개방에 따른 혜택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EU나 NAFTA가 보이고 있는 폐쇄적 지역주의와는 대비되고 있

NAFTA 등 폐쇄적인 지역블럭들에 의한 세계경제질서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역협력체제의 원리로서 확대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한국의 위상과 전략

APEC과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 모색은 탈냉전 이후 세계가 겪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지역적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을 강하게 촉진시키고 있는 한편, 이 지역은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 정치군사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이라고 하는 부정적 요인 때문에 갈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가능성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미래경제중심적 낙관론과 정치군사중심적 비관론을 넘어서서 정치경제, 정치군사, 사회문화의 3종 복합적 분석에 기반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의 불투명성은 한국에게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미래의 삶을 위해 국내개혁과 지구적 협력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적 협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APEC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외교역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역내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대우를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ASEAN 등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PEC 투자원칙 채택 등을 통해서 역내의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외국민간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동남아지역에서는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도입 효과를 얻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적극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에도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셋째, APEC의 다자간 협상의 틀을 통해서 선진국들에 의한 일방주의(unilateralism) 또는 양자주의적(bilateralism) 통상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PEC을 통해서 다자간 분쟁해결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통산마찰의 문제도 지역적 차원에서 대처할 수

다. 이는 APEC이 아태지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경제의 개방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APEC지역내에서의 지역적인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가 다자간무역체제를 보완하여야 하며, 세계경제의 모든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APEC이 UR의 성공과 WTO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있는 것이다.

넷째, APEC의 강화를 통해서 NAFTA, AFTA, EU 등 지역주의의 강화·확산을 견제하는 수단을 가지게 된다. 즉 APEC은 그 원칙상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APEC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NAFTA 등 역내 소지역주의의 배타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EU의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APEC 국가가 공동입장을 취함으로써 강력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APEC 수준의 협력사업으로 설정되고 있는 교통, 통신, 사회기반 시설 건설, 인적 자원 개발 등 공동관심분야에서의 지역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동지역에 대한 에너지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APEC 참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관계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적인 관계개선은 회피하고 있으나, 북한도 APEC에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의 문제를 지역문제의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최초의 통합 시도이기 때문에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역내의 안전보장, 전쟁방지 및 사회문화적 교류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교통, 통신 등 역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그 건설과정에서 경제적교류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함으로써 역내의 정치군사적 협조체제와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대폭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여덟째, 한국은 ARF 등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고 남북한의 군사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APEC의 불투명한 장래를 맑은 장래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APEC이 현재 단기적으로 겪고 있는 최대의 어려움은 미국, 일본, ASEAN 등간의 주도권 문제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APEC을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데 반해서, ASEAN은 미국의 패권적 주도권을 경계하여 아시아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 ASEAN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의 실리 중심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APEC이 성공하려면 미국적 길과 아시아적 길을 넘어서 '제3의 길'이 필요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중진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하겠다.

둘째, APEC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의 정치군사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중국과 일본의 균형관계, 북한의 군사력 사용 억제 등이 필수요소이며, 이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지역 중심국가들과의 협조하에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APEC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중반 이래 이 지역에 강하게 뿌리내린 일국 중심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각각의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자신의 삶의 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복합화에는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다양성과 이질성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창조적 조화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표 1>

권역별 주요경제지표

(단위: 백만명, 10억불, %)

	인구	GNP	1인당 GNP(불)	수출 (10억불)	수입 (10억불)
전세계	5,575 (100)	23,591 (100)	4,236	3,867 (100)	3,846 (100)
APEC	2,128 (38.1)	13,577 (57.5)	6,380	1,680 (43.4)	1,749 (45.4)
PBEC	2,050 (37.3)	12,322 (56.8)	6,010	1,489 (40.3)	1,491 (38.8)
EAEC	1,675 (30.5)	6,998 (22.4)	4,178	876 (23.7)	1,778 (20.2)
NAFTA	369 (6.7)	6,845 (30.5)	18,550	625 (16.9)	741 (19.2)
AFTA	331 (6.0)	334 (1.4)	1,007	178 (4.8)	191 (4.9)
EU	347 (6.3)	6,841 (27.8)	19,709	1,457 (39.5)	1,518 (39.5)

주: AFTA 및 EU는 GDP임.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3. 11.

출처: 통상산업부, 『APEC 현황과 전망』, 1995. 11.

<부표 2>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1993년)

구 분	GNP (10억불)	1인당 GNP (불)	교역 (억불)	인구 (백만명)	면적 (1,000 KM ²)
미 국	6,378	24,679	10,700	258	9,809
카나다	551	19,182	2,892	29	9,976
멕시코	392	4,553	1,144	86	1,958
ASEAN 6개국	471	1,377	4,356	342	3,055
(인도네시아)	139	717	652	195	1,905
(말레이지아)	65	3,396	926	19	330
(태국)	120	2,057	832	59	513
(싱가폴)	51	18,102	1,595	3	0.6
(필리핀)	55	831	301	66	300
(부르나이) ¹⁾	41	16,050	50	0.3	6
호 주	282	16,045	893	18	7,713
뉴질랜드	43	12,386	190	3	271
중 국	520	436	1,958	1,192	9,597
대 만	216	10,320	1,620	21	36
홍 콩	109	18,570	2,732	6	1
일 본	4,253	34,130	6,033	125	378
한 국	323	7,324	1,660	44	99.3
PNG ²⁾	39	830	36	4	463
APEC(A)	13,577	6,380	34,214	2,128	43,356
전세계(B)	23,591 ³⁾	4,236	77,131	5,575	136,255
A/B(%)	57.6	—	44.3	38.1	31.8

주: 1) GNP는 '92년, 1인당 GNP는 '90년 수치

2) '92년 수치(교역은 '93년)

3) IMF 경기전망(성장률 2.3%) 적용

자료: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1994. 6.

출처: 경제기획원, "APEC의 현황과 전망", 1994. 11.

〈부표 3〉

한국의 APEC 관련 주요통계(1994년)

(단위: 백만불, 천명, %)

국가	교역		투자('95. 9 누계)		관광	
	수출	수입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입국	출국
동북아	30,473	33,313	3,318.3	5,718.4	2,044	1,603
· 일본	13,523	25,390	307.0	5,190.3	1,644	1,052
· 중국	6,203	5,463	2,676.4	26.8	141	234
· 홍콩	8,015	660	315.5	414.5	122	203
· 대만	2,732	1,800	19.4	86.8	137	114
ASEAN	11,404	7,723	2,452.4	286.6	303.2	496.2
· 싱가폴	4,152	1,660	67.2	158.2	33	92
· 태국	1,835	620	202.8	0.9	69	247
· 말레이	1,652	1,876	457.9	126.6	26	31
· 인니	2,540	2,843	1,417.4	0.3	29	41
· 필리핀	1,212	412	304.3	0.6	149	84
· 브루나이	13	312	2.8	—	0.2	0.2
대양주	1,406	4,718	451.7	34.3	28	105
· 호주	1,232	3,782	373.1	21.6	23	76
· 뉴질랜드	157	663	14.6	12.7	5	29
· PNG	17	273	64.0	—	—	—
NAFTA	23,641	24,518	4,383.7	4,117.2	364	612.5
· 미국	20,553	21,579	3,551.4	4,083.3	332	577
· 캐나다	1,390	2,005	712.9	33.9	30	34
· 멕시코	1,289	229	74.7	—	2	1
· 칠레	409	705	44.7	—	—	0.5
대세계(A)	96,013	102,348	10,607.0	13,924.7	3,580	3,154
대APEC(B)	66,924	70,272	15,470.1	10,156.5	2,739.2	2,816.7
역내비중(B/A)	69.7	68.7	68.6	72.9	76.5	89.3

자료: 『한국통계 월보』, 『한국관광 통계』, 재정경제원 자료.

출처: 재정경제원, 『OSAKA APEC 경제지도자회의의 성과와 향후 전망』, 1995. 11.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1994 『APEC의 현황과 전망』.

통상산업부

1995 『APEC 현황과 전망』.

재정경제원

1995 『OSAKA APEC 경제지도자회의의 성과와 향후 전망』.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1990 『개도국 지역연구 결과보고서』.

고우성

1994 “ASEAN의 어제와 오늘”, 『국제문제』 제281호, 54-63쪽.

국회사무처

1990 『21세기 미국의 아태지역 방위전략 — 넌 워너 보고서』.

김세원

1994 “아시아태평양지역과 한국경제”, 『외교』 제29호, 27-38쪽.

김의곤

1994 “새로운 세계정치경제질서와 아태지역 경제공동체 전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12집, 437-455쪽.

김종철

1994 “한국과 아세안 제국의 공업화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 제1호, 1-22쪽.

노재봉

1993 『지역주의 심화와 한국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재봉, 유재원

1994 『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 그 시사점』, 정책연구 9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데이비드 히치코크

1994 “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과제”, 『국제문제』 제281호, 63-70쪽.

마리 와이든 보움

1994 “중화경제권은 새로운 경제거인이 되는가”, 『국제문제』 제281호, 42-53쪽.

민족통일연구원

1993 『제5차 APEC 회의를 계기로 본 아태지역 협력의 발전방향』.

박영일

- 1994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권의 형성: 역사적 전개와 전망”, 인하대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 제1호, 45-73쪽.

배긍찬

- 1994 “아·태지역 협력과 ASEAN”, 『외교』 제29호, 51-61쪽.

산업연구원

- 1990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1994 지역연구뉴스레터 제14호.

- 1994 지역연구뉴스레터 제17호.

세종연구소

- 1994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과 한국』, 세종연구소 출판부.

안병준

- 1994 “동아의 안보 및 협력과 한미일 동반관계”, 『외교』 제29호, 39-50쪽.

외교안보연구원

- 1992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향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 전망”.

유재원

- 1990 『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 정책과 투자환경 변화 — ASEAN의 산업화와 구조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동휘

- 1994 “국제질서변화와 한국의 지역협력 전략”, 『외교』 제29호, 15-26쪽.

이상우

- 1994 “국제화시대의 한국의 외교적 대응”, 『외교』 제29호, 51-61쪽.

이재성(편)

- 1993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1993 『아태경제협력의 심화방안 — 분야별 구상과 전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임천석(편)

- 1994 『한일경제협력의 실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 1995 『95년 주요 개도국 경제전망』.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1994 『아·태지역의 여성과 정치』, 제15회 국제학술세미나.

Amitav Acharya

1994 *An Armed Race in Post-Cold War South-East Asia; Prospects for Control*, ISEAS.

Anis Chowdhury and Iyanatul Islam

1993 *The Newly Industrialising Economies of East Asia*, Routledge, London.

APEC Secretariat

1994 APEC.

1995 *APEC Newsletter*, April.

1995 *Selected APEC Documents 1989-1993*, Feb.

1993 *A Vision for APEC; Towards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to APEC Ministers*, Oct.

1994 *Achieving the APEC Vision; Free and Open Trade in the Asia Pacific; Second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Aug.

1995 *Implementing the APEC Vision; Third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to APEC Ministers*, Oct.

1994 *A Business Blueprint for APEC, Report of the Pacific Business Forum*, Oct.

1995 *The Osaka Plan; Roadmap to Realising The APEC Vision, Second Report of the Pacific Business Forum*; Oct.

Chia Siow Yue (ed.)

1994 *APEC; Challenge and Opportunities*, ISEAS.

Clark D. Nehr

1993 *Southeast Asia in the New International Era* (Boulder et al.: Westview, 1991), 동남아지역연구회(역), 『현대 동남아의 이해』, 서울프레스.

F. Gerard Adams, et. al. (eds.)

1995 *Interdependence and New Directions for Developing Policy in East and Southeast Asia; The Report on the 5th ICSEAD Model Comparison Seminar*, (일) 국제동아시아연구센타, 북구주시,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5 *Southeast Asian Affairs*.

1994 *Contemporary South East Asia*, Dec.

1995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April.

Janadas Devan,

1994 *Southeast Asia; the Challenge of the 21th Century*, ISEAS.

Jonathan Rigg

- 1991 *Southeast Asia; A Region in Transition — A Thematic Human Geography of the ASEAN Region*, Routledge, London.

Lawrence T. Woods

- 1993 *Asia-Pacific Diplomac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Toronto.

M.S. Dobbs-Higginson

- 1994 *Asia Pacific; its role in the new world disorder*, Mandarin Paperbacks: Singapore.

Niels Mulder

- 1994 *Inside Thai Society, An Interpretation of Everyday Life*, Editions Duang Kamol.

Pasuk Phongpaichit

- 1990 *The New Wave of Japanese Investment in Asia; Determinants and Prospects*, ISEAS, Singapore.

Robert Elegant

- 1990 *Pacific Destiny; inside asia today*, Avon Books: New York.

Rolf J. Langhammer

- 1991 *Trade in Services between ASEAN and EC Member States*.

Serrano, Isagani, 이진아(역)

- 199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 『경제정의』 제20호, 202-265쪽.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 I. U.)

- 1994-1995년판 각국별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William Bodde Jr.

- 1994 *View From the 19th Floor; Reflections of the first APEC Executive Director*, ISEAS.

アジア経済研究所

- 1992 『アジア太平洋の 経済発展と 地域協力』.

慶應義塾大地域研究センター(編)

- 1991 『アジア太平洋経済圏の 新時代 — 構想, 課題, 挑戦』, 慶應通信.

都野尚典(編著)

- 1994 『アジア太平洋の 経済発展』, 税務經理協會.

藤間丈夫

- 1991 『動き始めた 環日本海經濟圏 — 21世紀の 巨大市場』, 創知社.

山神 進(編著)

- 1994 『アジア太平洋地域の 時代 — APEC 設立の 經緯と 展望』, 第一法規.
山澤逸平
- 1993 『アジア太平洋 2000年の ビジョン』, 三和總合研究所.
三井物産研究所, 재무부(역)
- 1993 『본격화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경제의 주도권 싸움』.
西原 正
- 1995 “アジア太平洋地域と 多國間安全保障協力の 仕組み — ASEAN地域フォーラム
 を 中心に”
岩田修一郎
- 1995 “東アジアの 國濟システムとAPEC”, 外交時報社, 『外交時報』第1316號.
矢野 暢(編)
- 1992 『東南アジアの 政治』, 講座 東南アジア學 第7卷, 弘文堂.
遠澤哲也
- “APEC・同非公式首脳會議(インドネシア)の 成果と 日本”
李國卿(編著)
- 1993 『アジア太平洋地域の 國際關係 — 政治 經濟 文化の 研究』, 文眞堂.
田中拓男(編著)
- 1994 『アジア太平洋の 地域協力 — 米國の 新通商戦略とアジア經濟の新展開』, 中央
 経済社.
佐佐木芳隆
- 1995 『新秩序への 道』, 中央公論社.
青木健
- 1994 『アジア太平洋經濟圏の 生成 — その動態と統合メカニズムの解明』, 中央經濟社.
坪内良博(編)
- 1990 『東南アジアの 社會』, 講座 東南アジア學 第3卷, 弘文堂.

A Study on the Cooperation in the Asia-Pasific Area

Young-Sun Ha, In-June Kim and Ki-Hwan Kim

Much has been discussed on forming the cooperation system in the Asia-Pacific area in 1990's. It is mainly due to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within this area. Changing situations of regional securit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conomic opening and the launching of WTO system, and the presence of exclusive regionalism make the cooperation in Asia-Pacific area more urgent and more important.

Discussions on the cooperation issues in APEC have mainly focused on forming a regional economic community such as EU and NAFTA. But the Asia-Pacific is a vast region and it contains many countries having various political-military interests and sociocultural settings as well as economic interests. This area has relatively poor historical experience of economic cooperaton to Europe and North America. Political-military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will influence economic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This report examines the central issues of forming the cooperation system in Asia-Pacific area, which include market access and economic cooperation, political-military cooperation, sociocultural cooperation, relations with the sub-regionalism within this area, relations with other largescale blocs beyond this area. Consideration on these issues offers the alternative views to mere economic liberalization; Competitions for the economic or political-military hegemony will have harmful impacts on cooperation. And more inclusive and more balanced efforts are needed in political-military,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Tel. : 880-6355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Tel. : 880-6389

김기환,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Tel. : 880-8509